
기획재정부 업무보고

2025. 12. 11.

기 획 재 정 부

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이재명 정부 6개월간 주요 경제성과

【 새정부 출범 이후 정책대응 】

◇ 출범 직후부터 ①2차 추경^{7월}, ②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^{8월}, ③관세협상 타결^{10월}, ④세제 정상화^{12월}, ⑤'26년 예산^{12월} 등 정책 릴레이로 **경제회복 및 성장 모멘텀 마련**

① 비상경제대응TF : 새정부 출범 첫날(6.4일)부터 **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응TF** 가동

- 3차례 회의(6.4, 6.9, 7.30)를 통해 국내경제·관세협상 상황 점검, **2차 추경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** 마련 등 가시적 성과 후 **성장전략TF***(부총리 주재) 체제로 전환

* 총 5회 개최,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중장기 성장전략 논의 및 AI·초혁신경제 대책 마련

② '25년 2차 추경 :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

- 새정부 출범(6.4일) 이후 20일 만에 30.5조원의 **추경안 마련**

* 새정부 출범(6.4일) 이후 20일만에 국회 제출(6.23일) → 31일만에 국회확정(7.4일)

- 소비심리 회복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개선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 1인당 15~55만원 수준의 **민생회복 소비쿠폰** 지급

* 한은('25.9월) "2차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.14%p 높이고 소비쿠폰 효과는 0.1%p 이상"

-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PF 단계별 유동성*을 5.2조원 공급하고, 취약차주의 성공적 재기를 위해 143만명 대상 **채무조정 패키지**** 지원

* ①(초기) 마중물 리츠(0.8조원), ②(착공) PF 특별보증(2.0조원), ③(분양) 미분양 안심환매(2.4조원)

** ①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16조원 소각, ②새출발기금 확대, ③성실차주 이차지원

③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: 경제 대혁신으로 “진짜성장” 구현

- “진짜성장”을 위한 4대 정책방향(①기술선도 성장, ②모두의 성장, ③공정한 성장, ④지속성장 기반 강화) 중심 ‘**새정부 경제성장전략**’ 발표(8.22일)

* ①AI 대전환·초혁신경제, 주력산업 고도화, 녹색대전환 등 ②지역균형성장, 중소벤처 지원, 사회안전메트 등 ③공정한 시장질서 조성(기술탈취 대응 등),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④생산적 금융, 규제·경제형별 합리화 등

④ **對美 관세협상 타결** : 수출 불확실성 해소 + 미국시장 진출 기반 강화

-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고, 부총리-트럼프 대통령 간 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 도출(7.30일)
-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회의, 美 재무부 면담, 유관기관 합동 ‘대미투자 TF’ 운영 등 대미 투자 관련 외환시장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전장치 마련을 총력 지원
- 대통령 주도하의 對美 관세협상 타결로,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대미투자(직접 2,000억불+조선 1,500억불) 구조변화 등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확정(11.2일)

⑤ **조세정책 정상화** : 약화된 세입기반 회복 및 공평·효율 세제 구현

- 감세를 환원하여 약화된 세입기반을 정상화하고 응능과세 원칙 및 비과세·감면 정비를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뒷받침
 - 법인세율 '22년 수준 환원(+1%p),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(최고 0.5→1%), 적극적 비과세·감면 정비* 등을 통해 5년간 약 +35조원 세수 확보
 - * 조합법인 저율과세 세율 조정 및 상호금융 예탁금·출자금 비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등
- 첨단산업 육성 및 자본시장 효율화·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마련
 - AI 등 첨단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*,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,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유지 등 경제·민생 지원 강화
 - *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: 71개 → 78개 (AI 5개, 미래형 운송수단 1개, 미래차 1개)

⑥ **'26년 예산안 편성** :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+ 5년만에 첫 여야 합의 헌법사한(12.2일) 확정

-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만큼 핵심 국정과제*를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 구축 및 국정철학 뒷받침
 - * ①아동수당 확대(7→8세), ②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, ③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
- 단순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“**전략적·성과중심**” 재정운용으로 「적극재정→성과제고→경제성장→지속가능재정」의 선순환 구조 정착
 - 국회에서 확정된 '26년 예산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8.1% 증가한 727.9조원으로 AI 대전환, 신산업혁신, 지방거점성장 등에 집중 투자
 -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·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**구조조정**하고 의무지출도 제도를 개편하여 역대 최대인 **△27조원 절감**

【 성과 : 경제회복 및 성장 모멘텀 마련 】

① 경기 반등

- '24.2분기 이후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% 내외 경기부진,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역성장
 - * 경제성장률(전기비, %): ('24.1Q)1.2 (2Q)△0.2 (3Q)0.1 (4Q)0.1 ('25.1Q)△0.2 (2Q)**0.7** (3Q)**1.3**
- 2분기부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개선으로 경기부진 반전
 - * 소비심리(기준=100): ('24.11)100.7 (12)88.2... (4)93.8 (6)108.7 (8)111.4 (10)109.8 (11)112.4<8년만에 최고>
- 새정부 '온전한 첫 경제성적표'인 3분기는 **1.3%** 성장 → **15분기 만에 최고**
 - 美 관세에도 수출이 선방하고 내수가 성장 견인,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 주도
 - * '25.3Q 성장기여도(전기비, %p): (내수)1.2 (순수출)0.1 [수출 0.9, 수입 0.8] / (민간)0.9 (정부)0.4

② 증시 사상최고

- 상법 개정,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효과로 **코스피 사상 첫 4,000 돌파**(10.27일), 주요국 대비 **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***
 - * 증시 변동률(12.8일, 6.2일 대비): (韓)+53.9 (美)+15.3 (유로)+6.9 (日)+35.0 (中)+17.2 (대만)+34.8

③ 민생 회복

- **민생회복 소비쿠폰** 등 추경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*되며 **소상공인 체감경기** 5년만에 최고 수준**
 - * '25.3Q 소매판매(전년비 +1.5%) 14분기 만에 (+) 전환, 숙박·음식점업 생산(+1.5%) 10분기 만에 (+) 전환
 - ** 소상공인 체감 BSI: ('24.11)62.4... ('25.1)47.6 (2)51.3... (7)61.5 (8)72.3 (10)**79.1** <5년 만에 최고> (11)75.1
- **고용**도 도소매, 예술여가, 사업시설 등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 **증가폭 확대**
 - * '25.2Q→3Q→10~11월 취업자(전년비 증감): (도소매)0.8→1.3→2.9 (예술여가)0.7→4.1→6.6 (사업시설)△1.5→△0.6→3.8

	경기	증시(코스피)	민생(소상공인 체감 BSI)
정부 출범초	('25.1Q)△0.2% 성장	2,699pt (6.2일)	('25.6월) 67.6
현재	('25.3Q) +1.3% 성장	4,000pt 돌파 (10.27일)	('25.10월) 79.1

② '26년 대내외 여건

□ (기회)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조 + 국내 내수 회복 흐름 지속

○ (대외) 주요국 확장재정,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조 지속

* 美 빅테크 자본지출(전년비, %, '25.8→11월 전망): ('24)55 ('25°)55→60 ('26°)19→35

○ (대내) 소비·투자 등 내수회복 가속화, 반도체 수출 호조

* '25→'26년 성장전망(%): (한은)1.0→1.8 (KDI)0.9→1.8 (IMF)0.9→1.8 (OECD)1.0→2.1

-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등 계기 외국인 투자 확대 가능성

□ (도전) 세계경제 성장·교역 둔화 +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

○ (대외) 美 관세영향 본격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·교역 둔화 전망

* '25→'26년 세계경제 전망(% OECD<'25.12월>): (성장)3.2→2.9 (교역량)4.2→2.3

- 주요 이벤트 계기*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

* 연준 의장 교체('26.5월), 美 중간선거(11월) 등

○ (대내) 잠재성장률 하락, 양극화 구조, 거시경제 리스크 등 상존

▶ **잠재성장률***이 생산연령인구 감소, 투자 위축, 생산성 정체로 **빠르게 하락**

* '10년대 3%대 → '25년 1% 후반 → '30년대 1% 내외 → '40년대 0%대

▶ 단기 민생안정 성과에도 불구, ①지방·②중소기업·③소상공인·④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성장 정체로 부문간 **양극화 구조('K자형 성장')** 상존

* ①지역내 총생산 증가율(% 연평균, '15~'23년): (수도권)3.4 (비수도권)1.7

②노동생산성(제조업, '20→'23년, 한국생산성본부): (대기업)372→422 (중소기업)135→139

③자영업 취약차주 연체율 '25.1Q 12.24%(사상 최고), 2Q 11.34% / ④1분위만 순자산 1년전보다 감소('25.3월, △4.9%)

▶ **외환시장*·부동산**** 등 **잠재리스크 관리**도 긴요

* 원/달러 환율(기말): ('25.1Q)1,472.9 (2Q)1,350.0 (3Q)1,402.9 (10)1,424.4 (11)1,470.6 (12.9)1,472.3

** 서울APT 가격(% 전주비): (10.3주)0.50→(12.1주)0.17

③ 향후 정책방향

□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'26년을 **'한국경제 대도약 원년'**으로 만들기 위해

- ①경제정책 기획·조정 강화, ②잠재성장률 반등, ③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, ④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, ⑤적극적 국부창출, ⑥재정·세제·공공 혁신을 중점 추진

Ⅱ. 중점 추진과제

1. 경제정책 기획·조정 강화

① '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

- '26년을 '한국경제 대도약 원년(잠재성장률 반등 + 양극화 극복)'으로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'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→ '26.1월 발표
- ①거시경제·민생 안정, ②성장동력 확충, ③양극화 구조 극복, ④지속성장 기반강화 등 4대 분야, 15대 과제, 50개 세부과제 추진

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 주요 골자(안)

① 거시경제·민생 안정	
① 경기 활성화	①적극적 거시경제정책, ②소비·투자·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
② 민생 안정	①식품산업 경쟁촉진,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, ②소상공인 생산성 제고, ③서민 생계비 경감
③ 리스크 관리	①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, ②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
② 성장동력 확충(기술선도 성장)	
④ 국가전략산업 육성	①K-반도체 육성, ②방산 4대 강국 도약, ③게임·푸드·뷰티 등 K-컬처 육성, ④석화·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⑤ 경제혁신 본격화	①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, ②R&D 혁신, ③탄소중립·에너지전환
⑥ 新대외경제전략 추진	①韓美 통상협상 후속조치, ②수출시장 다변화, ③공급망 강화
⑦ 인적자본 극대화	①청년·중장년 고용촉진, ②재도전·재기지원, ③기술인력 양성·고등교육 혁신, ④저출생 대응, ⑤외국인력 전략적 활용
③ 양극화 구조 극복(모두의 공정한 성장)	
⑧ 지역균형성장	①지역 산업·인프라 확충, ②지방 우대, ③지역관광 촉진, ④사회연대경제 활성화
⑨ 대·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	①대·중소기업 지식·기술협력, ②기술탈취 방지, ③중소기업 글로벌진출 등 경쟁력 제고
⑩ 산업안전투자 확대	①안전투자 금융지원·인센티브 확대, ②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
⑪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	①임금격차 완화, ②비정형근로자 보호, ③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
⑫ 사회안전메트 강화	①서민금융지원 확대, ②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, ③기초생보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
④ 지속성장 기반강화	
⑬ 생산적 금융	①벤처투자 확대, ②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, ③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WGBI 편입 준비, ④첨단산업 금융지원
⑭ 규제개혁	①데이터 공유 확대, ②기업규모별 규제 개선, ③경제형별 합리화
⑮ 재정·공공기관 혁신	①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, ②고용·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, ③조세체납 및 국세의 수입 관리, ④공기업 혁신, ⑤국유재산 제도개선, ⑥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

②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

- 경기 활성화 모멘텀을 지속 확산하고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
 - (경기 활성화) 1.8% + α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·투자·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
 - '26년 확정 예산(727.9조원, '26년 총지출 전년 대비 +8.1%)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(1.1일)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준비
 - 소비회복 가속화, 투자 촉진, 수출 지원 등 부문별 보강 대책 마련
 - (리스크 관리) 장·차관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, 외환·부동산시장 등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
 -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기 시장대응조치 실행 + 주요 외환수급 주체와 논의*를 통해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
 - *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 간 조화될 수 있는 New Framework 마련, 주요 수출기업 환전·해외투자 실적 등 점검, 금융회사 해외투자 영업실태 점검
 -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

③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

- (경제정책 총괄·조정) 장관들이 실질적 토론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부처간 협업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
 - ▶ (경제관계장관회의) 정부 출범 이후 총 15회 개최하여(평균 12개 부처 참석) 통상환경 대응, 민생 안정,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현안에 대해 43개 주요대책 마련
 - ▶ (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) 민·관이 협력하여 초혁신경제 전환과 주력산업 재편 등 경제성장 동력 확충
 - ▶ (부처 간담회) 주요 이슈별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첨단산업투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,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설정
- (국책연구기관 협업) 경인사연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정책 기획·조정 뒷받침
 - 신산업, 일자리 혁신, 인력양성, 6대 구조개혁*, 지역균형발전, 경제안보, 양극화 대응, 데이터경제 등 근본적 구조개혁 과제 발굴
 - * 규제·금융·공공·연금·교육·노동

2. 잠재성장을 반등

① 전략적 산업정책

- (AX)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·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**AI 대전환 본격 추진**
 - AI 로봇, 자동차, 선박 등 **피지컬 AI** 1등 국가 목표로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R&D·실증·금융·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
 - ▶ (AI 로봇) AI 기반 자율협업 로봇, 물류창고 이동 로봇 등 휴머노이드 개발
 - ▶ (AI 자동차) 시범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'자율주행 실증도시' 조성
 - ▶ (AI 선박) 고신뢰·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자율운항해역 등 실증요건 완화 등
 - 기업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고,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,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
- (GX) 2035 NDC 이행 및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**K-GX 전략** 수립
 - 민관합동 K-GX 추진단을 운영('26.1월~)하여 전력·산업·인프라 등 경제 전반의 녹색 대전환 전략 수립('26.上)
- (초혁신경제) 15대 선도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및 **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**
 - 국가전략첨단소재·부품, 기후·에너지·미래대응, K-붐업 등 3대 분야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
 - (첨단소재·부품(5개)) 차세대 전력반도체 실증양산 체제 구축, LNG화물창 국산화* 추진, 그래핀 상용화 로드맵 수립 등 기술 상용화
 - * 화물창 실증사업계획 수립('26.上) 및 핵심 기자재 생산기반 구축 지원
 - (기후·에너지(6개)) 태양광, 해상풍력, HVDC 등 기술개발·실증으로 **재생e 보급확산** 및 안정적 전력생산 지원, 스마트 농·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(각1개)
 - (K-붐업(4개)) AI바이오 산·학·연·병 거점 선정(1개), K-디지털헬스케어 **新수출모델** 마련, K-뷰티 클러스터 지정, K-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 등
 - 기업 중심의 프로젝트별 추진단*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, R&D·금융·세제·인력·규제 등 패키지 지원 강화
 - * 앵커/중소 기업-학계·연구기관-협·단체-주무부처 및 관계부처 + 지방정부

②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(국정과제 33)

- (규제혁신)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, 기업규모별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재검토
 -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, 공정위 심사·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을 완화(100→50% 이상)
 - *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에 특례 규정을 마련(반도체 업종)
 - 민간·정책자금(첨단기금 등) 출자를 통한 설비구축 재원조달 및 장기임대(금융리스업 필요최소한 허용)로 초기 투자부담 경감 기대
 -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발굴·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성장촉진형으로 전환 추진
 -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·개인정보 등 데이터 신산업 규제 개선('26.上)
- (경제형벌) 「경제형벌합리화 TF」를 통해 국민·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
 -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되, 기업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금전적 책임성 강화
 -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목표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부처의 적극적 과제 발굴 지원
 -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위해 경제계·국민 건의사항 적극 수렴·반영*
 - * 1차방안 발표시 72년만에 배임죄 개선 및 중기중앙회 건의사항 등 반영

⇒ 1차 합리화 방안('25.9)에 이어 연내 2차 방안을 발표하고, 내년에도 추가 개선 지속 추진
- (상생 성장전략) 한-미 관세협상, APEC·UAE 순방 등에서 창출된 경제성과*를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·확산
 - * 한미 관세협상대미 자동차·부품 관세 인하(25→15%), APEC GPU 26만장 확보, UAE방산·AI 등 1,000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, 튀르키예시농 지역 제2원전 건설 사업 참여기반 마련 등

⇒ '대·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' 마련·발표(~'26.1/4)

 - (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) 대·중기 對美 투자프로젝트 동반진출 지원 확대*, 대기업·금융권·협력사 상생금융 프로그램(1조원 규모 현기차 사례**) 확산 등
 - * (당초) 3년간 최대 10억원 → (확대) 3년간 최대 15억원 + 보증 200억원
 - ** 예) 현대기아차·금융권이 협력해 총 1조원 규모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프로그램 가동

- (상생협력 기반 강화·확산) 성과공유제·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*, 상생금융지수** 도입('26년)

* 성과공유제 : (現) 제조업 중심 수위탁기업간 거래 → (改) 플랫폼유통업대리점업 등 거래까지 확대
 납품대금 연동제 : (現) 주요 원재료 → (改) 주요 에너지(전기·연료 등) 경비까지 확대

**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은행(기업·국민·하나·신한·우리·농협)부터 단계적 확대

- (서비스산업)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입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('26.上)하고, 서비스경제 질적도약을 추진

- AI 활용 新서비스 및 관광·데이터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*, 숙박·고령친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도개선 및 발전전략 수립**

* 지역관광 토탈 패키지 본격 추진('26), 분야별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 추진

** 숙박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6.上), 고령친화 서비스 육성방안 마련('26.下 잠정)

③ 지역균형성장 적극 지원 [국정과제 53]

- (5극·3특 성장기반 구축)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대해 성장 5종세트(규제·혁신·금융·인재·재정)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

*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(기업 투자 계획 + 중앙·지방정부 지원계획) 수립('26.3월)

- (메가특구 지원) 특화산업 성장공간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,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패키지 제공(~'26.上)

- (지방우대)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·세제 적극 지원

- (재정)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,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, 통합지표*를 도입하여 권역별 차등지원 근거 마련 및 차등지원('26년 7개 사업**) 지속 확대

*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정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

** 아동수당, 노인일자리,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(비수도권유형), 국민내일배움카드(특별훈련수당),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금, 자부담률 차등

- (세제)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, 지방이전세제 실효성 제고* 등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역할 강화

*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기간을 지역낙후도에 따라 확대(7~12년 → 8~15년)

- (지방재정 자율강화) 초광역단위 사업지원 강화를 위해 '특별계정' 신설

- 포괄보조사업 확대*, 사업별·지역별 특성 반영 보조사업 공모방식 개선, 국고보조금 절감분 유사사업 활용 등 지역 자율성 획기적 제고

* 초광역특별계정 및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 단계적 확대('26~'30년)

3.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

① 물가 안정 및 국민생활비 경감 (국정과제 60)

- (물가관리체계 강화) 각 부처 차관급을 ‘물가안정책임관’으로 임명하여 소관 품목(농축수산물, 가공식품 등) 책임 관리 + 공공요금·수수료 관리 체계 보완
- (생활물가 안정) ①(먹거리) ①수급관리, ②할인지원, ③할당관세 등 가용수단 총동원 + ④담합 방지, 유통구조 개선, ⑤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 물가안정 대책 병행
 - ① 과일류 등 가격강세 품목 수급관리 강화 ②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,080억원 투입
 - ③ 식품원료 22종 할당관세 연장 및 설탕 할당관세 물량 12만톤(‘25년 10만톤)으로 확대
 - ④ 돼지고기, 계란, 설탕, 밀가루 등 식품산업 분야 담합행위 적극 감시 및 엄중 제재
 - 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(5개소),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(10만평), 국가 수산업 AX실증 시설(10억원) 조성 등
- ②(석유류) ①유류세 인하 및 ②경유·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검토(∼’26.2월)
 - ① 인하폭: (휘발유)△7% (경유·LPG)△10% ② (경유)1,700원/ℓ, (압축천연가스)1,330원/m³ 초과분의 50%
- (생활비 경감) ①천원의 아침밥, 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, ③국민교통비 정액패스, ④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 지원 확대
 - ① (현행) 年 대학생 450만명, 산단근로자 5만명 → (개선) 대학생 540만명, 산단근로자 90만명
 - ② 바우처 : (‘25년) 131만 → (‘26년) 143만 가구 / 에너지복지서비스 : (‘25년) 4.7만 → (‘26년) 12.6만 가구
 - ③ 수도권 기준 6.2만원(청년·어르신·2자녀 5.5만원, 3자녀·저소득 4.5만원 등) 초과 이용분 100% 환급
 - ④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기본적인 통신서비스(검색, 네비게이션, 메시지 전송 등) 이용 가능

② 청년 고용 대책

- (맞춤형 지원) AI 직업훈련 확대, AI 자격증·경진대회 등 쉬웠음 청년 유형별(예: 취업의사 유무, 직장경험 유무 등)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(’26.1분기)
 - (취업의사 有) 경력직 선호 채용 트렌드에 대응하여 직업훈련·교육, 일경험 등 통해 취업역량 향상 지원
 - 온·오프라인 AI 교육·직업훈련 + AI 자격증 등을 통해 청년 AI 역량 강화(‘AI 한글화’) + 실무 중심의 일경험 확대
 - 권역별 AI 경진대회 및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(일자리 첫걸음 플랫폼) 등을 통해 취업·창업 연계 지원 강화
 - (취업의사 無) 장기 미취업 위험군(구직단념, 고립은둔 등) 선제 발굴 → 회복 프로그램(심리상담, 사회활동 참여 등)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
- ※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병행

3 소상공인·자영업자 역량 강화

- (생산성 제고) ①제품개발, ②업무자동화, ③홍보·디자인, ④판로개척 등 업종별 소상공인 맞춤형 AI 활용 지원을 통한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
- (매출기반 확대) 지역사랑상품권('26년 24조원 발행)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상향*
 - * 국비보조율 상향(수도권 2→3%, 비수도권 2→5%, 인구감소지역 5→7%) ('26년)
- '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'(국가단위 대규모 할인축제) 개최해 소비활성화 추진('26.下)
- (부담경감) 영세 소상공인(연매출 1.04억원 미만) 대상 25만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('26~), 채무조정*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어려움 해소
 - *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을 거쳐 징수 곤란으로 인정된 체납액(5천만원 이하)에 대한 국세 납부의무 소멸 시행

4 저소득층 지원

- (기초생보 강화) '26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(649만원, +6.51%)으로 최대 급여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*하고, 의료급여 부양비도 완전 폐지
 - * '26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월 195.1→207.8만원으로 확대(4인가구 기준)
- 최저생활보장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
 - * 연구용역·관계기관 TF 논의 등을 거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('26.7월)
- (근로 인센티브 제고)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고, 청년층 근로 인센티브 확충으로 근로의욕 제고
 - * 기초생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: (대상) 만29세→34세 이하, (공제) 40만원+30%→60만원+30%
-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EITC 제도 지원효과 등 검토
- (통합돌봄·아동수당 확대)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'2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*하고, 아동수당 지원대상·금액 확대('25년~7세·10만원→'26년~8세·최대13만원)
 - * 현행 12개 시·군·구 국비 대상 시범 → 내년부터 전국 229개 시·군·구로 확대(4~10억원 차등지원)

4.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

① 한미 전략적 투자 추진

- (이행체계 마련)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「**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**」 제정 및 실행
 - 중층적 의사결정체계*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, 경제·외환시장 영향 등 면밀 검토 → 대미협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선정 추진
 - * 사업관리위원회(長산업부장관) 상업성 심의 → 운영위원회(長재경부장관) 종합적 심의 → 대미협의를
 - MOU 및 팩트시트 안전장치*를 특별법에 명시하여 법적 이행 담보
 - * 예) 年200억불內 기성고 집행,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조정 요청, 상업적 합리성 등
 - 재정 및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*
 - * 외환보유액 운영수익 등으로 자원 조달, 전담 공사의 한시적 설립을 통해 관리·운용
- (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발굴) 양국이 win-win 할 수 있도록 기업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환류효과와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

②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및 G20 논의에 전략적 대응

- (대외신인도 관리·유지) 견조한 **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**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, 우리 외환·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
 - 한국경제설명회 개최,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긴밀한 정책협의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
 - 역대 최대규모 수준('26년 50억불 限)으로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
 - MSCI 종합 로드맵(12월)을 통해 외환·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WGBI 편입('26.4월~)에 따른 국채 투자자금의 원활한 유입 지원
- (G20 논의 전략적 대응) '26년 美 의장국 下 **G20 패러다임 전환**에 대응*하여 美 재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글로벌 경제·금융 현안 논의에 주도적 참여
 - * 최근 4년간 개도국 의장국 下 G20의제가 非경제분야로 대폭 확장 → 美는 G20 설립취지에 따라 경제성장, 금융혁신 및 규제현대화, 부채 지속가능성 등 경제·금융 현안에 집중할 계획
- '28년 韓 의장국 수임에 대비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제 설정,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논의 기반 마련

3 통상환경 변화 대응

- (전략 마련) 국제질서의 구조적·근본적 변화*에 대응하여 경제·외교·안보·문화 쏠 요소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**新대외경제전략 마련**

* 보호무역주의 강화, 투자유치 경쟁 심화,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, 경제·안보 융합 및 지정학 시대 도래

- 공급망 리스크 상시화 등 대외 불확실성 속 ①경제안보 강화
 - ②전략적 경제협력 및 개발금융, ③전략적 해외투자, ④문화×산업 연계를 통해 무역장벽 등 제약을 극복하고 新사업기회 창출
- (수출·수주지원)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 이익공유를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‘(가칭) **전략수출금융기금**’ 신설

4 경제안보·공급망 리스크 대응

- (경제안보 대응강화) 관계부처(경제부처+안보부처)·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**경제안보 점검회의** 신설(국정과제)
 - 현재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 및 안보 정책을 융합하는 **효율적 경제안보 대응 체계**를 행정부 내에 구축
- (공급망 선제대응) 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’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주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**공급망안정화** (위원장: 부총리) **중심 대응**
 - 경제안보품목*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(EWS) 구축과 함께, 국내생산, 수입 다변화,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위기에방 및 대응 추진

* 특정국 高의존 등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품목을 지정·관리중(300여개 지정)

- (공급망 지원강화) 경제안보·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**공급망안정화 기금*** 적극 운용(초저리대출 제공, 핵심광물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** 등)

* 수출입은행에 설치한 정책금융 기금으로 정부보증채로 자금 조달(‘26년 10조원)

** 특별투자한도 신설(‘26년, 1,000억원), 간접투자대상 확대, 수은 및 금융기관 출연 허용

5. 적극적 국부창출

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

-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·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고, 국가전략분야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‘한국형 국부펀드’ 설립 추진

* 테마섹(싱가포르), Future Fund(호주)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 벤치마크

② 국유재산의 가치·활용 극대화를 통한 “국민 富” 창출

- (지속가능성 제고) 양질의 재산은 보유·적극 활용하고 효용성이 낮은 재산은 제값 받고 처분하는 등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

- 300억원 이상 매각의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, 부처별 매각전문심사 기구 신설 등 거버넌스를 개편하고, 할인매각은 원칙적 금지*

* (예외 예시) 노후건물(예:30년↑) 등 관리비용 등 고려시 처분 필요성이 높은 경우

- 공공서비스를 위한 필수 자산은 선제적으로 매입, 적극 활용*

* 해외 주요 재외공관(뉴욕, 멕시코 등)의 복합개발을 위한 부동산 매입·개발

- (국유재산의 정책적 기능 제고) 국유재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서 전략적 신산업 지원,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적극적인 가치 창출

- 국유재산 복합개발*을 통해 '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.5만호 착공

* 수도권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 및 폐파출소 등 유휴재산 활용

- AI·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 공적 활용 제고를 위해 사용료 감면 확대(5%→1%), 중앙·지방간 협력 강화*

* 중앙·지방 국유재산정책협의회,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한 국유재산 공동 활용

③ 국채의 효율적 관리 및 수요저변 확대 ⇒ 이자비용 절감

- (효율적 국채 관리) 투자자 성향, 조달 비용, 상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**최적화된 장·단기 국채 발행비중 운영** 및 **잔존만기 관리강화** 통해 **비용절감**
 - * 국채 잔존만기('25.9월말) : (韓) 12.7 (美) 5.8 (日) 8.7 (佛) 8.4 (獨) 7.8
 - ** 채권 발행주체간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·공사채·보증채 등의 발행시기·물량·만기를 조정하여 수급 관리 + 금리 변동성 면밀히 모니터링
-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하여 시중 단기투자 수요 충족 및 이자 절감 도모, 전략적 바이백 등을 통한 만기상환 및 차환 리스크 관리 강화 병행
- (국채 수요저변 확대) 외국인, 개인 등 **국채 수요저변을 확대**하여 국채 보유주체의 다변화 추진
 -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('26.4월~)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확대 노력 강화, 특히 기존 주요 투자자 외에 신규 외국인 투자자 적극 발굴
 -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*를 통해 국민 여유자금의 국채 투자 촉진
 - * 3년물 도입, 정기 이자지급 방식으로 개편,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 허용(연금형 국채 도입)

④ 초혁신 조달생태계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

- (신산업 성장지원) **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**으로 AI, 로봇, 기후테크 등 **미래산업 혁신기업이 스케일업(Scale-UP)**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 - '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, 혁신제품 지정도 5천개('25.11월, 2,566개)까지 단계적 확대
 - * ①혁신제품 전용 보증상품 도입('25.9월), ②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('26년 839 → '30년 2,150억원)를 통해 초기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구축
 - (AI 조달생태계 구축) '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' 도입을 통해 AI 제품·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, 조달행정의 **AI 대전환을 가속화**하여 공공 AX 선도
 - AI 제품·서비스 규제 진입장벽 최소화 및 국가계약 특례 신설·연계를 통해 공공의 테스트베드 역할*을 강화하고, 조달 과정의 AI 전환 준비** 추진
 - * 기존 규제샌드박스 + 국가계약특례 ⇨ 포괄적 규제샌드박스 제공(원스탑맞춤형서비스)
 - ** '26년 AI기반 조달컨설팅, 가격조사, 공사원가 검토 → 공공조달 AI 전환 계획 수립
- ➡ 공공조달을 혁신 지렛대로 삼아 국부를 창출하는 선순환 성장구조 기여

6. 재정 · 세제 · 공공 혁신

① 재정 · 예산 혁신 및 재정운용 투명성 · 책임성 강화 (국정과제 17)

- (재정·예산 혁신) 예산 편성·집행, 성과관리 등 재정 전반 고강도 혁신
 - (전략적 자원배분 기능 강화) 재정전략회의를 조기 개최(5월말→4월초) 하여 차년도 예산안 핵심 아젠다와 자원배분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
 - (지출구조조정) 저성과 재량사업 뿐 아니라 의무·경직성 지출, 多부처 유사중복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 원점(zero-base) 재검토 및 구조조정
 - 민간전문가와 예산 누수·낭비 요인을 점검하여 지출구조조정에 반영
 - (성과평가 강화) 객관성·실효성이 미흡한 기존 평가제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환류도 강화
 - (재정집행의 정책기능 제고) 경기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해 '26년 예산을 경제상황 및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집행관리
 - '25년 예산도 연말까지 총력 집행*하여 경기회복세를 공고화
- * 월 2~4회 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통해 집행계획, 실적 등 지속 점검
- (재정 투명성·책임성) 재정운용全过程에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중심 재정 거버넌스 강화
 - (국민참여 확대) 국민주권예산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, 재정 全 분야로 국민참여 범위 확대*
 - * 신규 예산사업 발굴 위주 → 지출효율화·제도개선 제안 등까지 확대
 - (재정정보공개 및 역량강화) 중앙·지방·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(「모두의 재정」구축)하고, 예산 관련 자료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*
 - * ①부처별 사업설명자료 등 재정 관련 자료 공개 확대 ②'26년 예산안부터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 지속 공개 ③예비비 사용계획서 및 집행보류·배정유보 사유 국회 보고
 - 민간 전문가, 지방정부 공무원, 일반국민의 재정역량 강화 및 교육 확대 추진

② 공평과세 토대 위에 생산적·실용적 세제 구현

□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 유도

- (주식 장기투자 지원) 자본시장 장기투자 Two-track 지원 검토 →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종목 또는 통합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- (혁신자본 지원 강화)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요건 완화 및 벤처·첨단산업 관련 투자기구*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

* 코스닥벤처펀드, 기업성장펀드(BDC) 등

□ 글로벌 기술경쟁 뒷받침하는 세제 운용

- (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)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 등 대응을 위해 생산촉진세제 도입 추진
- (첨단산업 투자지원) 반도체·이차전지·미래형선박 등 첨단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
- (전략적 관세정책) 불공정무역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반덤핑관세, 철강·자동차 분야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등 운영

□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

- (비과세·감면 정비) 관행적 일몰연장('26년 일몰 65건)을 탈피하여 조세 지출 전수분석 → 목적 달성하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 정비
 - 기존 조세감면 연장 시 세수감소 보완방안 마련,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및 심층평가 내실화 등 조세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 - 조세지출결산서('26년 도입) 국회제출 등을 통해 조세지출 사후검증 강화
- (신규세원) 합성니코틴('26.4월중), 글로벌 최저한세('26.6월 최초신고)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

③ 공공기관 혁신 (국정과제 18)

- (공공기관 초혁신 성과 창출) **공기업 초혁신프로젝트**를 통해 비용·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민 체감도 제고
 - 디지털 전환, 자동화 등 AI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*하여 경영 효율화 및 투자여력을 확보하고, 집행·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서비스 공급역량 확충
 - * 공운위(AI소위)·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(AI 지원기관)·기재부 간 AI 협의체를 적극 운영(월 2회 개최)
- (안전관리 책임성 강화)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근거 신설 및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*, 안전관리등급제 강화** 등 **안전사고**에 대한 **공공기관 책임성 제고**
 - *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있는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·해임이 가능하도록 공운법 개정('25.12.4. 발의)
 - ** 심사대상 확대(73개→104개), 안전 성과 지표 배점 확대(300점→350점) 등
 -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 인력·예산 확보 지원* 및 교육 강화
 - * 안전관련 인력 증원 적극 협의,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점검, 수시예타 적극 활용 등
- (기능혁신 본격 추진) 유사·중복기능 수행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통폐합, 부채·부실투자 등이 누적된 기관 **전면 기능혁신** 착수
 - * 철도공기업 통합 마무리('25.12.8일 발표 → '26년 상반기 운영통합 → '26년 하반기 기관통합)
- (책임·성과 기반 관리체계 재편)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·거버넌스 개편 (공운법 개정 후 '26년 상반기 중 전면 실시) 및 **기관장 책임성 제고 방안** 도입
 - * ❶ 의사결정의 민주성 강화: 민·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재편, 보수분과위 신설
 - ❷ 대표성 강화: 민간위원 수를 현 과반수(11명)에서 2/3(14명)로 확대, 상임위원 신설
 - ❸ 기관장 책임경영: 기관장평가·기관평가의 병행추진으로 기관장의 책임성 제고,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, 공공기관 경영혁신 유도